북핵 6자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대표단이 14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13 북핵합의' 이후 北 행보는

'핵 불능화'까지 험로

초기 이행조치는 낙관…'보상' 공방 계속할 듯

'2·13합의' 이후 관심은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북한의 핵폐기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일단 중유 5만t과 맞바꿀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감시 수용 등 60일 내 북한이 취할 초기 이행조치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본격적인 문제는 현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포함한 초기 이행조치 이후의 북한 행동이다.

북한이 초기조치로 받을 5만t 외에 나머지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핵프로그램 완전 신고와 현존 핵시설 불능화 조치 등을 해야 하며,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불능화 조치를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대섞인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호락호락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장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해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번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중유 100만t 지원 대가로 '핵시설 불능화' 대신 '핵시설 가동 임시중지'를 언급한 것도 이를 잘 드러낸다.

동결이나 봉인·폐쇄 수준으로 해석되는 핵시설 가동 임시중지는 핵시설을 아예 못쓰게 만든다는 불능화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도 제기되지만 아직 북한 매체들이 핵불능화 조치를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고, 이번 보도가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도 이르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번 보도가 2·13 합의문에서 언급조차 못하고 넘어간 기존 핵무기나 핵물질 폐기는 고사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까지 이행하는데도 만만찮은 험로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포함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취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전환 의지를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이르기까지 취할 각종 조치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 보따리를 풀며 미국을 압박하고, 이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는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맥을 같이 한다.

조선신보 역시 "조미 두 나라가 비핵화 구호에 소리를 합쳐 공동보조를 시작했지만 행동과 행동을 흥정하는 두 나라의 긴장 관계는 계속 된다"고 전망해 주목된다.

일단 북한이 이번 합의를 어떻게 보고, 향후 합의 이행을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북한 외무성의 공식 입장 등에서 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오늘 실무접촉 남북장관급회담 의제 뭘까?

쌀·비료 지원 등 우선 논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도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이 15일 개성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빠르면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장관급회담의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관급회담의 의제는 회담의 성격 자체가 남북간 최고위급 협의체라는 점에서 정치·경제·군사·문화·체육 등 전 분야를 망라하며 이번 회담의 경우 무엇보다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논의가 중단된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최우선으로 다룰 의제는 대북 쌀·비료 지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핵실험으로 남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쌀과 봄 파종기에 필요한 비료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측이 올해 지원분에 작년 유보분까지 더해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년에 유보된 쌀 차관은 50만t이며 비료는 10만t 추가 지원이 논의되다 중단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이처럼 요구할 지, 우리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 지는 모두 회담장에 가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대북 쌀·비료 지원 문제가 풀리면 북측이 이와 연계해 중단했던 이산가족상봉행사의 재개 시기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5월25일로 예정됐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부의 반대로 시험운행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핵문제 진전에서 보듯 군부의 강경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면 전격 합의도 기대해 볼만 하다.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진다면 작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경제협력'도 이뤄질 수 있다.

당시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남측이 북측에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면 북측은 지하자원 등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놓고 남북이 맞서면서 표류해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문제도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이 오갈 지도 주목된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4일 남북정상회담이 의제에 포함될 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연합뉴스

핵폐기 검증 IAEA 역할 주목

〈국제원자력기구〉

北 영변 핵재처리시설 사찰…우라늄 농축 확실한 검증 불투명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 폐기와 동결, 그리고 불능화 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요원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IAEA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의보다는 이행이 더욱 중요한 사항이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IAEA를 통한 사찰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핵폐기를 위한 초기 조치를 이행하는 지 여부가 이번 6자회담 합의의 기본 조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재가동할 것임을 밝힌 것은 IAEA 사찰 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IAEA 고위 관리들은 지난 수개월간 북한 외교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사찰단의 복귀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허락만 떨어지면 수일 내로 IAEA 사찰단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IAEA 소식통이 전했다.

IAEA 사찰단은 우선 북한이 60일 내에 이행하기로 합의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영변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검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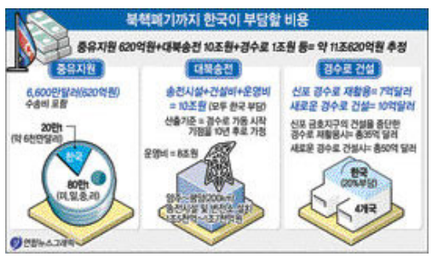
합의문은 영변 핵재처리 시설은 명시하고 있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IAEA의 분석가들은 아직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숨길 수 있는 산악지역의 지하 터널이 수 없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미 제네바 협정에 따라 IAEA 사찰단은 1994년부터 영변 등지에 체류하며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감시해왔으나 북한이 2002년 12월 핵시설 재가동을 전격 결정하고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한 데 이어 IAEA 사찰단을 추방했다.

북한이 2003년 1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핵 위기가 심화됐다. 그해 2월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한 이후 IAEA와 북한간의 협력 관계가 단절됐다.

그 후 IAEA는 총회와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북한에 대해 IAEA의 핵안전 조치 이행과 IAEA 사찰 체제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베를린=연합뉴스



"북핵협상 주요사항 빠뜨려"

아이혼 美CSIS 고문 "폐기 시한 없어"

미국 등 북한 핵 전문가들은 14일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북한 핵시설 폐쇄와 핵무기 해체 시한이 정해지지 않아 합의사항 이행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인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번 협정은 현상유지보다는 의미가 있지만 분명히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다"면서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북한의 핵무기 제거 마감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고문은 "핵폭탄 및 핵무기 제조를 위해 생산된 핵물질의 제거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합의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문제를 명시하지 않은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베이징·도쿄AFP·AP=연합뉴스